미래 동력 아동 · 청소년 정부가 적극 투자하겠다

정부, 빈곤아동 · 청소년 종합대책 확정 발표
적극적 사회투자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비전 제시

사진제공 : 기아대책(KFHI) 기획홍보실
기사 : 김지민(꽃등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재학 중)

"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. OECD가입국이며 월드컵 4강에 진출한 나라입니다. 그런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갑니다. 대구에서도 죽었고 부산에서도 죽었습니다.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"

지난 4월에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대표가 한 말이다.

대구시 아동아사사건, 부실도시락 파문, 보육정책까지 이어져 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이다.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민간차원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보자는 취지의 'We Start'의 활발한 운동과 시민단체들의 정책적 요구 등의 성과로 작년 7월 정부는 빈곤아동 · 청소년 종합대책인 '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'을 발표한데 이어 10개월 뒤인 지난 5월 1일 이를 확정, 발표했다. 이 전략은 소극적으로 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참여정부의 국가비전을 반영하고 있다.

'빈곤아동 · 청소년 종합대책'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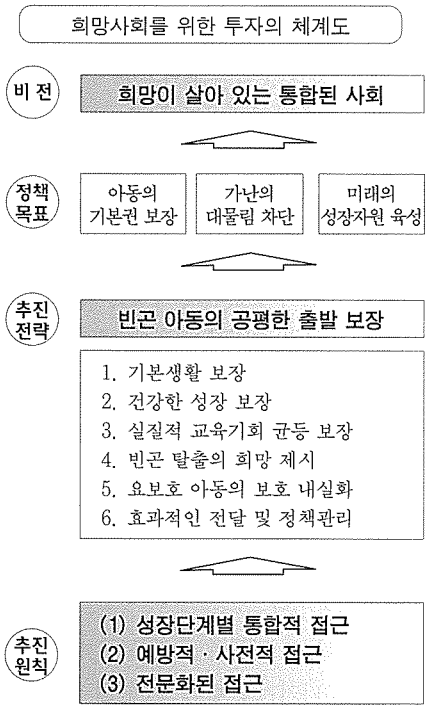
▲ 빈곤아동 생활보장 = 학교별로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급식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사회복지관 등 200곳에 취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800개소를 통해 급식체계를 강화한다.

빈곤아동가정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주기 위해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 개정을 추진한다. 또 출산 ·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.

▲ 건강보장 = 저소득계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현재 10% 수준인 지원대상을 내년에는 20%까지 확대키로 했다. 의료급여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 위 계층 12세 미만 아동에서 내년에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 또한 보육시설별 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및 검진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(빈곤아동 · 청소년 종합대책 체계도, 보건복지부, 2004. 7)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· 청소년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.

▲ 교육 보장 = 보육지원확대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평균소득의 100%이하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. 또 지역아동센터 표준프로그램을 개발, 보급하고 실태조사 및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, 저소득층 학생 위성방송, PC 지원과 함께 이-러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한다.

오는 9월부터는 182개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 순회교사 308명을 배치해 학교폭력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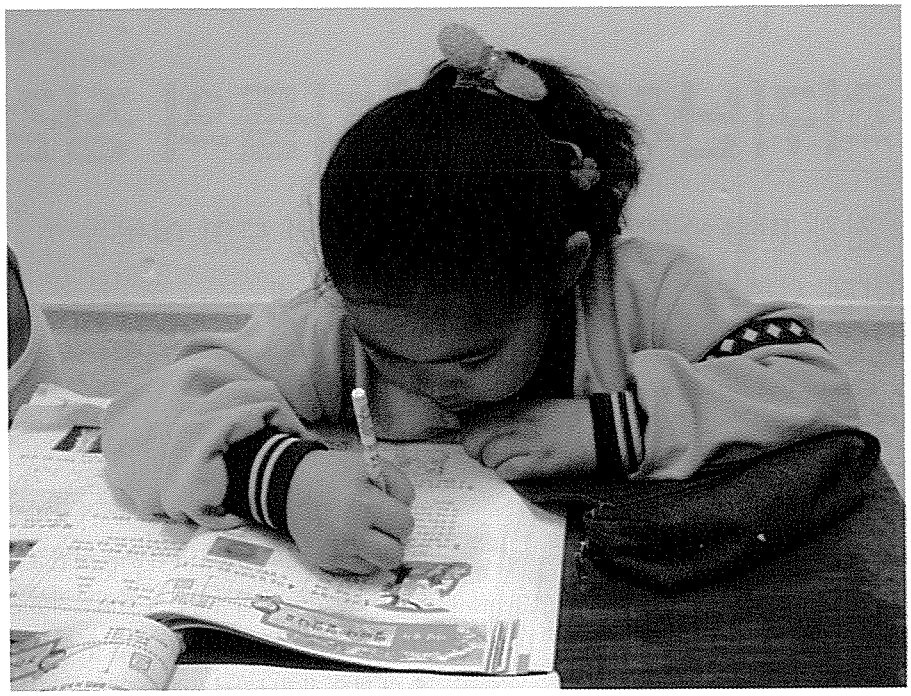
교육복지 등 학생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.

▲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= 1인당 500만원씩 1500명을 지원하는 2005년도 이공계 신입생 희망경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선정된 학생에게 대학 재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. 또 교내외 근로장학을 통해 연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'대학생활 보장 프로그램' 도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대학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 이밖에도 성적우수자 위주에서 가계곤란자 위주로 학자금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저리의 학자금 대여 제도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.

▲ 위기 아동 · 청소년 보호 = 2003년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0%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일반국민, 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, 라디오,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또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비율을 높이고 가정친화적인 그룹홈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. 또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전화 (1388)을 통한 상담,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'지역 청소년 보호종합지원센터' 를 확대 추진해 전국적인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

아울러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 · 취업 지원을 위해 설치한 '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-해밀' 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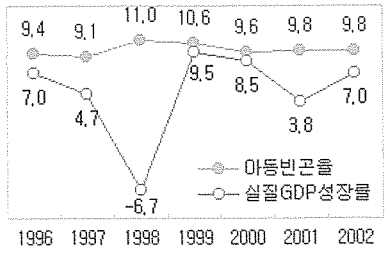
▲ 이동 ·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.

▲ 전달체계 구축 = 복지관련 상담전화를 통합해 '통합복지콜센터' 를 설립하는 한편 15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, 강화할 방침이다. 빈곤아동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확보, 아동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.

그동안 등안시 되었던 아동복지부분에 정부의 종합대책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가족구조의 변화와 그 밖의 복합적인 사회문제들 속에서 눈물짓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이젠 귀를 기울여야하며, 아동의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무시 못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. 이러한 때에 민간차원의 움직임은 있어왔지만 한발 더 앞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 섞인 상상도 해본다.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듯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. 노인인구증가, 출산율하락 등의 문제는 현재 정부의 최고의 이슈들이다. 이에 대응하여 올해 보육예산을 60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단순한 재정지원에만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. 이번 빈곤아동과 청소년 종합대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미래인 아동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대물림되기를 기대하며,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달체계의 확립이 실현되어야한다. 이는 공공차원에서 가능하며 점차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민간과 개인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. S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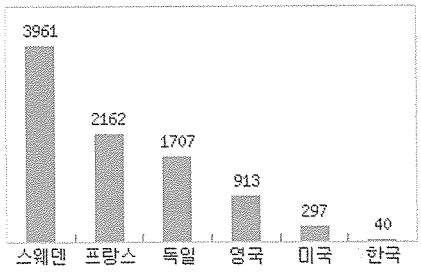
아동 빈곤율 & GDP 성장률 추이(%)



◈ 최현수,류연규(2003)

copyright datanews

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비교(달러)



◈ 정부 관계부처 합동

copyright datanews